2020년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보고서

인천광역시의회
Incheon Metropolitan Council

2020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인천형 자치분권 & 균형연구회

(대표의원 : 남궁 형)

인천형 자치분권&균형발전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연구

○ 자치와 분권이 실현가능한 지방정부 인천 연구

○ 지역혁신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 모델 제시

Ⅱ 연구회 개요

○ 연구주제 : 인천형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모델 제시

○ 기　　간 : 2020. 1. 1. ~ 2020. 11. 30

○ 참여의원　남궁 형 대표의원, 신은호 의원, 김성준 의원

○ 주요활동내역

연번	일시	행사명
1	02.20.(목) 11:00	자치분권시대 사회복지 분권 강화를 위한 '중증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을 위한 세미나'
2	05.18(월) 15:00	2020년 인천자치분권 학교 출범식 및 토크콘서트
3	07.24(금)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 촉구 성명서 발표
4	08.13(목) 10:30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초청강연회
5	07.28(화) 14:00	동일방직 및 동인천 북광장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6	10.7(수) 16:00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보고 간담회
7	10.27(화) 10:00	안전분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인천안전폴리스 협약 및 출범식
8	10.28(수) 15:00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인천시 안전분야 등 자치분권 연계 정책개발 방안 마련 세미나
9	10.30(금) 13:00	자치분권 속 교육이야기 "우리동네 교육을 부탁해"

○ 정책연구용역 발주(2020년 신설)

- 용 역 명 : 자치분권 시대 인천형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독감 및 토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지역 예측 분석 연구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 ~ 90일(3개월)
- 용 역 비 : 10,000천원

Ⅲ 세부 연구활동 내용

1. 자치분권시대 사회복지 분권 강화를 위한 '증증 발달장애인 주거 보장을 위한 세미나

- 일　　시 : 2020. 2. 20(목) 11;00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별관 2층 세미나실
- 주요내용
  · 중증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 자치분권시대 중앙-지방정부간 복지사업 역할 분담 재정립 방안 마련
- 관련사진





2. 2020년 인천자치분권 학교 출범식 및 토크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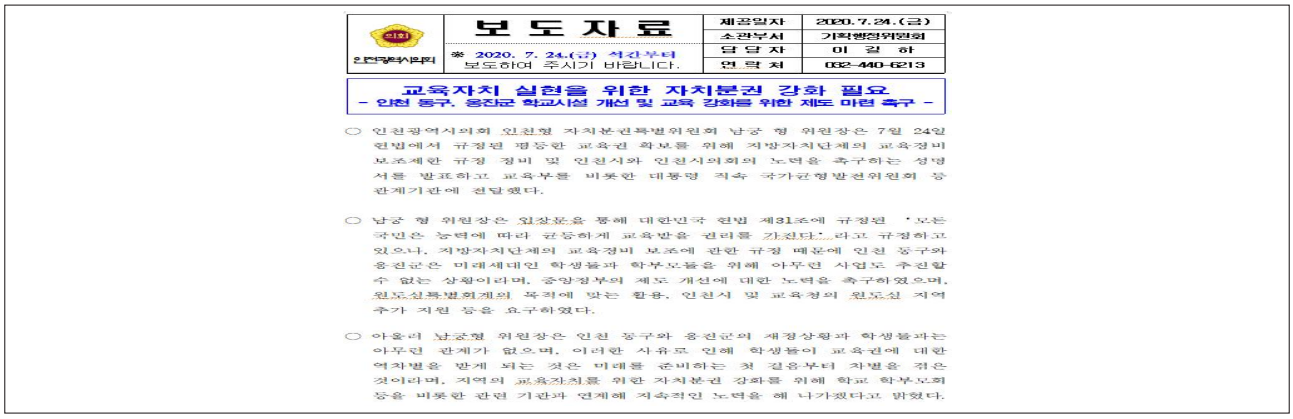
- 일　　시 : 2020. 5. 15(금) 15:00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1층 로비
- 주요내용
  · 인천 자치분권 학교 출범식(공동교장 : 박우섭 전 남구청장, 조택상 전 동구청장)
  · '자치분권으로 인천을 꿈꾸다' 토크콘서트
- 관련사진





3.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 촉구 성명서 발표

- 일　　시 : 2020. 7. 24(금)
- 주요내용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을 개정해야 함.
  ·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경비 보조제한 군·구 교육기관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 관련자료



보 도 자 료

제공일자	2020. 7. 24.(금)
소관부서	기획행정위원회
담 당 자	이 길 하
연 락 처	032-440-6213

※ 2020. 7. 24.(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 필요
- 인천 동구, 옹진군 학교시설 개선 및 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촉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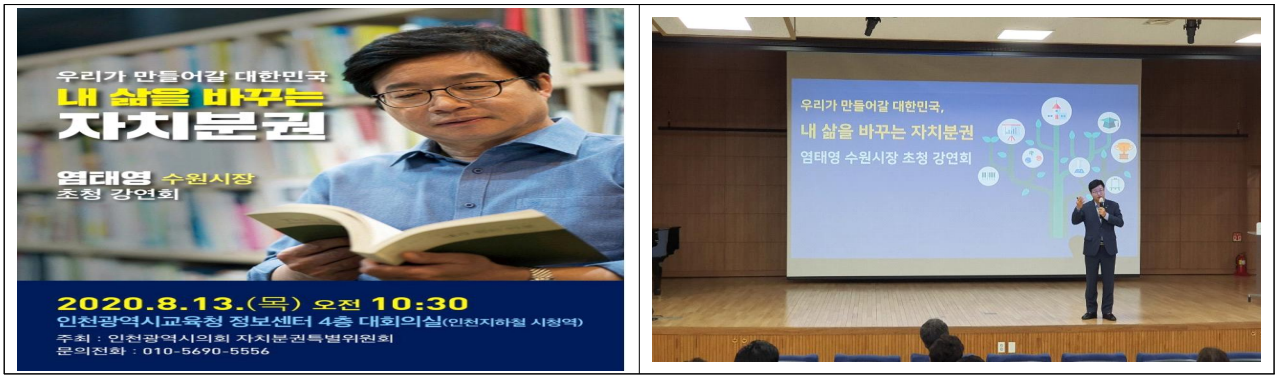
○ 인천광역시의회 인천형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남궁 형 위원장은 7월 24일 본회의에서 규정된 평등한 교육권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 정비 및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를 비롯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 남궁 형 위원장은 임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때문에 인천 동구와 옹진군은 미래세대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아무런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원도심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활용, 인천시 및 교육청의 원도심 지역 추가 지원 등을 요구하였다.

○ 아울러 남궁형 위원장은 인천 동구와 옹진군의 재정상황과 학생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학생들이 교육권에 대한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첫 걸음부터 차별을 겪은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자치를 위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학교 학부모회 등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초청강연회

- 일　　시 : 2020. 8. 13(목) 10:30
- 장　　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공유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자치분권의 방향
- 관련사진



5. 동일방직 및 동인천 북광장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20. 7. 28(화) 14:00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별관 2층 세미나실
- 주요내용
  · 만석동 동일방직 부지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방향
  · 동인천역 북광장 개선 방향과 정책적 제언
- 관련사진





6.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보고 간담회

- 일　　시 :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별관 2층 세미나실
- 주요내용
  · 인천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연구(인천연구원)
  · 이양사무 발굴 및 조직변화연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제21대 국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사항 관련 보고(남궁 형 의원)
- 관련사진





7. 안전분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인천안전폴리스 협약 및 출범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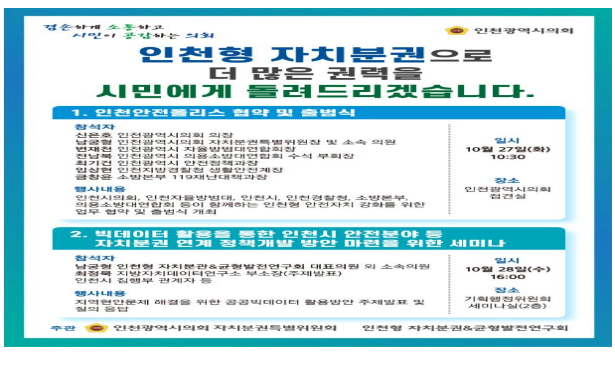
- 일　　시 : 2020. 10. 27(와) 10:00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접견실
- 주요내용
  · 인천형 안전분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협력체계 구축
  · 민·관 협력을 통한 인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신고·협력체계 강화
- 관련사진





8.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인천시 안전분야 등 자치분권 연계 정책개발 방안 마련 세미나

- 일　　시 : 2020. 10. 28(수) 16:00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별관 2층 세미나실
- 주요내용
  ·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빅데이터 활용방안 논의
  · 공공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체계적 자료 관리 및 생산 방안 논의
- 관련사진





9. **자치분권 속 교육이야기 “우리동네 교육을 부탁해”**

- 일　　시 : 2020. 10. 30(금) 13:00
- 장　　소 : 창영사회복지관
- 주요내용
  · 교육혁신지구의 이해와 사례 분석
  · 교육경비보조제한 자치구인 동구의 교육혁신지구 지정 방안
- 관련사진



참고1. 세미나. 토론회 자료

1. 인천형 자치분권&균형연구회

부 록

(대표의원 : 남궁 형)

- 세미나, 토론회 자료

참고 1 **세미나 및 토론회**

동인천역 북광장 개선 방향과 정책 제언

박연화

Ⅰ. 들어가며

우리사회에 노숙인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IMF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서울역 등 도시 곳곳에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모여든 노숙인의 모습은 당시의 우울한 사회상의 한 단면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이후 노숙인 지원정책은 꾸준히 시행되고 있지만 노숙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일시적인 사회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이고 사회구조적으로 발생되는 빈곤이라는 위기계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폐쇄, 실직 등 위기계층이 많이 발생하리라 우려되는 이 시점에 이 토론회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현 노숙인 정책은 시설에 입소한 이들에게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탈노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시설을 옮겨 다니거나, 쪽방이나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를 전전하다 다시 거리노숙으로 나오는 회전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리노숙에서 지역사회 복귀까지 연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제공과 주거연계 지원 등 노숙인 지원대책을 확대하는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동인천역은 거리 노숙인의 주요 집결지인 서울역, 영등포, 부평, 주안, 동인천역까지 지하철 1호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천시(2020. 1월)에 따르면 인천시의 노숙인은 거리노숙인 144명 포함하여 총 483명이다. 보건복지부[1](2019. 12월)에 따르면 노숙인 규모는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인천은 4번째이지만 거리노숙인은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이러한 자료에 비추어 인천은 노숙인 시설에 대한 부적응이나 자활·자립을 위한 연속적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인천시 노숙인 지원정책의 부족함이 없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노숙은 개인과 가족의 불행이며 이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의 과제이다. 노숙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노숙인 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주요 노숙 현장에 노숙인 지원기관(종합지원센터나 현장상담소)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꾸준한 아웃리치와 전문상담을 통해 초기 노숙인 발굴 및 노숙

1) 보건복지부 시,도별 노숙인 등 현황 참조

인의 지역사회 복귀는 물론, 고용, 주거, 의료 등 노숙인 자립·자활을 위한 법률에 의거한 지자체의 책임을 다해야한다. 특히 오랜 시간 사실상 방치된 동인천역의 만성 노숙인의 신체질환 외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 정신과 질환의 고위험군 노숙인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은 시급한 상황이다.

Ⅱ. 인천 노숙인 현황[2)]

(2019.9.30.기준/단위: 명)

계	중·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동인천역 일대	주안역	인천 터미널	기타	연수구 일대	문화 예술회관	시청역 주변	부평역	동암역 등	경인교대 지하상가	서구 일대
156	40	36	20	6	-	3	3	35	7	4	2

시도별 노숙인 등 현황

(단위 : 명, '19. 12월말 현재 기준)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6,516	6,674	1,697	1,785	1,136	344	752	145	118	931	256	697	52	247	689	321	528	144
자활	1,523	804	79	120	28	21	102	30	-	223	36	15	17	45	-	3	-	-
일시보호	1,173	572	30	27	1	204	17	113	10	52	6	-	5	23	3	-	102	8
거리노숙인	1,246	477	135	156	161	8	36	2	6	178	19	5	30	5	17	-	11	-
재활요양	6,933	1,736	531	721	526	111	144	-	102	478	195	677	-	174	669	318	415	136
쪽방주민	5,641	3,085	922	761	420	-	453	-	-	-	-	-	-	-	-	-	-	-

연도별 노숙인 등 현황('19년 말 기준)

(단위 : 명)

연 도	'15	'16	'17	'18	'19
노숙인	11,901	10,645	10,828	10,801	10,875
자활	1,683	1,613	1,583	1,684	1,523
일시보호	1,045	798	994	1,047	1,173
거리 노숙인	1,125	969	862	895	1,246
재활·요양	8,048	7,265	7,389	7,175	6,933
쪽방주민	6,072	6,053	5,705	5,664	5,641

*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8년에 비해 전체 노숙인이 소폭 증가하였고, 거리노숙인도

2) 2019-202년 인천시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보건복지부 202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증가하였다.

* 전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서울 3, 부산 2, 대구 1, 대전 1, 경기 3, 제주 1군데로 총 11개소가 있다. 노숙인서비스 이력관리,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전담 수행하고 있다.

Ⅲ. 동인천역 북광장 노숙인 정책 제언

동인천역 광장은 시민들 누구나 쉼을 가지거나 만남의 장소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는 시민들이 피해 다니는 곳이 되었다. 거리노숙인과 쪽방 주민들로 음주, 폭력, 욕설이 오고 가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광장을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서둘러 노숙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이를 수행할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먼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3]에 근거한 노숙인 복지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노숙인 등은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주거지원**: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지원(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0조 1항)

- **급식지원**: 노숙인 급식지원시설에서 필요한 급식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노숙인 급식시설에서는 노숙인 등에게 위생적인 급식 제공(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1조 1항, 2항, 3항)

- **의료지원**: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2조 1항)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노숙인 진료시설로 정해진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지만, 분만하거나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단서)

- **고용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 지원(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 1항)

- **응급처치**: 중대한 질병, 동사 등 응급상황이 있을 때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관련업종 종사자로부터 필요한 조치 제공(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1항)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1년 6월7일 제정,

다음은 노숙인 지원정책 수행기관인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가 중요하다.
노숙인은 하나의 결핍에서 시작되어 총체적 결핍 상황까지 내몰린 사람이기에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노숙인을 지원할 기관의 설립은 매우 시급하게 요구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심리상담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마지막으로 서울역 노숙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거리노숙인 지원사업을 해 온 현장 경험에 비추어 보면, 노숙인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고 동인천역사 및 광장 등이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유지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인천시는 법률에 명시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노숙인 보호 및 상담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지원센터의 설치가 중요하고 반드시 설치되어야함을 요청한다.

‘어느 여성 노동자의 길’을 그리다

- 또 하나의 인천 역사 문화 살리기 -

김도진: ‘어느 여성 노동자의 길’ 제안 모임 대표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기념관 대표

인천동일방직에서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기념관에 이르는 700미터의
거리를 ‘어느 여성 노동자의 길’로 만들고 싶다.
그 길을 걸으면서 당연시 되는 우리 일상의 여유와 평화가 사실은
어느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음을 잊지 않고 싶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 우리의 누이들은 힘든 부모를 돕고 오빠와 남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학교가 아닌 공장에 가야 했다. 실밥과 먼지로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는 작업장에서 눈을 부비며 일해야 했다. 지금의 사회 경제적 여유는 이런 우리의 누이들의 희생과 무관치 않다.

“당시 공장에서 일한 아이들처럼 나는 둘째 언니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돈벌러 갔듯이 나도 그렇게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꿈을 갖는다는 것은 언감생심! 내가 돈벌어야 남동생이 학교에 갈 수 있었으니까 돈을 벌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이렇듯 우리 누이들은 학교대신 공장을 택했다.

그러나 가족을 생각하는 우리 누이들의 애틋한 선택은 현실에서는 가혹했다. 저임금에 기초한 70년대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에 묶여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비인격적 무시를 당하면서 만성적으로 임금을 착취당하면서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소모적 인간으로 살아야 했다.온몸으로 사회모순을 견디며 살아야 했다.

이런 우리 누이들의 삶과 저항이 고스라니 녹아 있는 곳이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37번지에 위치한 동일방직과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1동 183번지에 위치한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기념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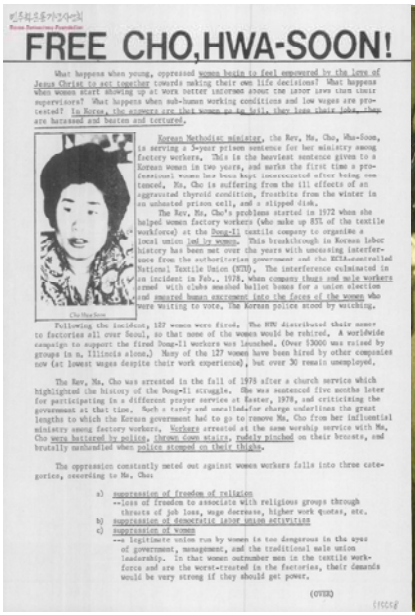
동일방직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조 여성지부장을 탄생시킨 여성노동운동의 출발지로서 1950년대 지은 의무실, 1960년대 건립한 강당, 여공들이 지내던 기숙사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리고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공장주의 사주를 받는 어용노조의 방해와 공장주를 비호하는 비민주적 국가의 탄압을 피해 피신한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2층 건물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이곳에서 일어났던 동일방직 민주노조운동은 1970년대 한국노동운동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 되었다 . 전체 조합원 1393명 중 88%인 1214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임금착취와 차별대우에 항의해 민주노동조합을 세웠다. 1976년 노조는 조합원 매수 등 노조파괴에 맞서 항의농성과 파업을 벌이던 조합원 수백 명이 경찰의 강제연행에 맨몸으로 저항했다.

결국 여성노동자 124명은 불순분자, 빨갱이라는 누명을 덮어쓰고 직장에서 쫓겨나야만 했다. 이 때부터 기독교회관 과 명동성당, 노총회관에서의 단식농성을 이어가면서 해고자들의 기나긴 복직투쟁은 시작됐다.

결국 이 동일방직 사건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노조운동으로 인정받았다. 이것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조지 오글 목사와 조화순 목사에게 한국인권상을 수여 하면서 그 공로를 인정하였다.최근 2020년 6.10민주항쟁 33돌 기념식에서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조지 오글 목사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한국 현대사의 의미 있는 공간이 여기 인천 동구에 그대로 남아 있다. 지금은 한적하고 적막한 구도심의 흔한 거리가 되고 말았지만 이 곳은 한국 근현대사를 증언하는 역사 문화의 공간이고 이 곳은 1883년 개항 이후로 근대를 거쳐 해방이전 까지 종속적 산업화의 유산과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의 기억들을 고스라니 담고 있는 근현대사의 역사적 공간이다. 나는 이곳에 ‘어느 여성노동자의 길’을 그리고 싶다.
인천동일방직에서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에 이르는 700여 미터의 거리를 ‘어느 여성노동자의 길’로 만들고 싶다. 그 길을 걸으면서 당연시 되는 우리 일상의 여유와 평화가 사실은 어느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음을 잊지 않고 싶다. 현재 우리가 맘껏 누리고 있는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맨 몸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싶다. 짧은 거리지만 우리 아이들과 손잡고 걸으면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임을 또 ‘지금의 우리를 있게 누군가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할 것’을 말하면서 걷고 싶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손과 발 근육에도 기록할 수 있다. 머리의 기억만큼 근육의 기억도 오래 간다.그리고 근육의 기억은 행동을 낳는다.
나는 ’ 어느 여성 노동자의 길 ‘을 걸으면서 나의 손과 발 근육에 우리의 산 역사를 기록하고 싶다.


FREE CHO,HWA-SOON!

What happens when young, oppressed women begin to feel empowered by the love of Jesus Christ to act together towards making their own life decisions? What happens when women start showing up at work better informed about the labor laws than their supervisors? What happens when sub-human working conditions and low wages are protested? In Korea, the answers are that women go to jail, their jobs, they are harassed and beaten and tortured.

Korean Methodist minister, the Rev. Ms. Cho, Hwa-Soon, is serving a 3-year prison sentence for her ministry among factory workers. This is the heaviest sentence given to a Korean woman in two years, and marks the first time a professional woman has been kept incarcerated after being sentenced. Ms. Cho is suffering from the ill effects of an aggravated thyroid condition, frostbite from the winter in an unheated prison cell, and a slipped disk.

The Rev. Ms. Cho's problems started in 1972 when she helped women factory workers (who make up 85% of the textile workforce) at the Dong-Il textile company to organize a local union led by women. This breakthrough in Korean labor history has been met over the years with unceasing interference from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and the KCIA-controlled National Textile Union (NTU). The interference culminated in an incident in Feb., 1978, when company thugs and male workers armed with clubs smashed ballot boxes for a union election and smeared human excrement into the faces of the women who were waiting to vote, the Korean police stood by watching.

Following the incident, 127 women were fired. The NTU distributed their names to factories all over Seoul, so that none of the women would be rehired. A worldwide campaign to support the fired Dong-Il workers was launched. (Over $3000 was raised by groups in n. Illinois alone.) Many of the 127 women have been hired by other companies now (at lowest wages despite their work experience), but over 30 remain unemployed.

The Rev. Ms. Cho was arrested in the fall of 1978 after a church service which highlighted the history of the Dong-Il struggle. She was sentenced five months later for participating in a different prayer service at Easter, 1978, and criticizing the government at that time. Such a rarely and unreliable charge underlines the great lengths to which the Korean government had to go to remove Ms. Cho from her influential ministry among factory workers. Workers arrested at the same worship service with Ms. Cho were battered by police, thrown down stairs, rudely pinched on their breasts, and brutally manhandled when police stomped on their thighs.

The oppression constantly meted out against women workers falls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Ms. C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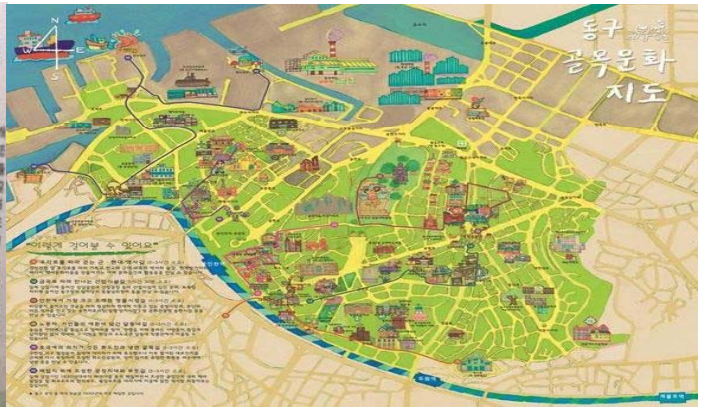
a) suppression of freedom of religion
--loss of freedom to associate with religious groups through threats of job loss, wage decrease, higher work quotas, etc.
b) suppression of democratic labor union activities
c) suppression of women
--a legitimate union run by women is too dangerous in the eyes of government, management, and the traditional male union leadership. In that women outnumber men in the textile workforce and are the worst-treated in the factories, their demands would be very strong if they should get power.

(OVER)





산업선교회 등 탄압속 정의실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과 공공데이터 활용에서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부소장
2020.10



큰 목차

1. 데이터에 대한 이해

2. 사회가치 및 사회문제

3. 지리정보의 활용사례

4. 제안

경향신문

경향신문·공공의창, '산불예방대응 소방서 지도' 공동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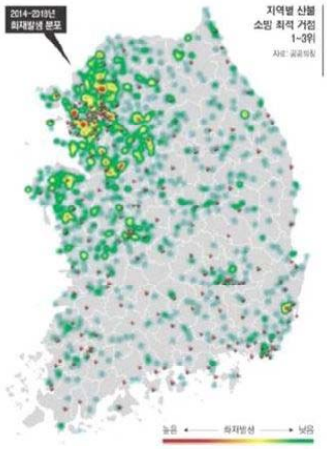
최근 5년간 봄철 산불 데이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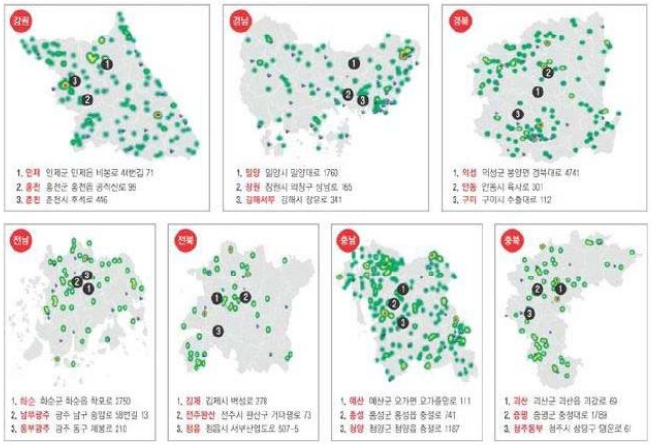
한시적 '거점소방서' 필요성 입증...7개 광역도서 '최적지' 3곳씩 선정

■ 발생 빈도·거리 모면 봄철 산불 잡을 '최적지' 보인다

충남, 경기 이어 최다 산불 발생...예산소방서가 '최적지'
충북은 괴산소방서...경남, 밀양·창원·김해서부소방서 순
전문가 "거점소방서에 장비·인력 투입 땐 실효성 높아져"

이번 데이터 분석과 지도 작성은 상대적으로 소방력 동원이나 대응이 용이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7개 도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해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위치데이터와 전국 219개 소방서의 주소데이터를 지도 위에 펼쳐놓고, 산불의 빈도와 발생지를 감안해 도별로 대응의 최적 위치에 있는 소방서 1~3위를 추렸다. 산불 다발지역 사이 최적 지점과 가장 근접한 소방서가 거점소방서로 설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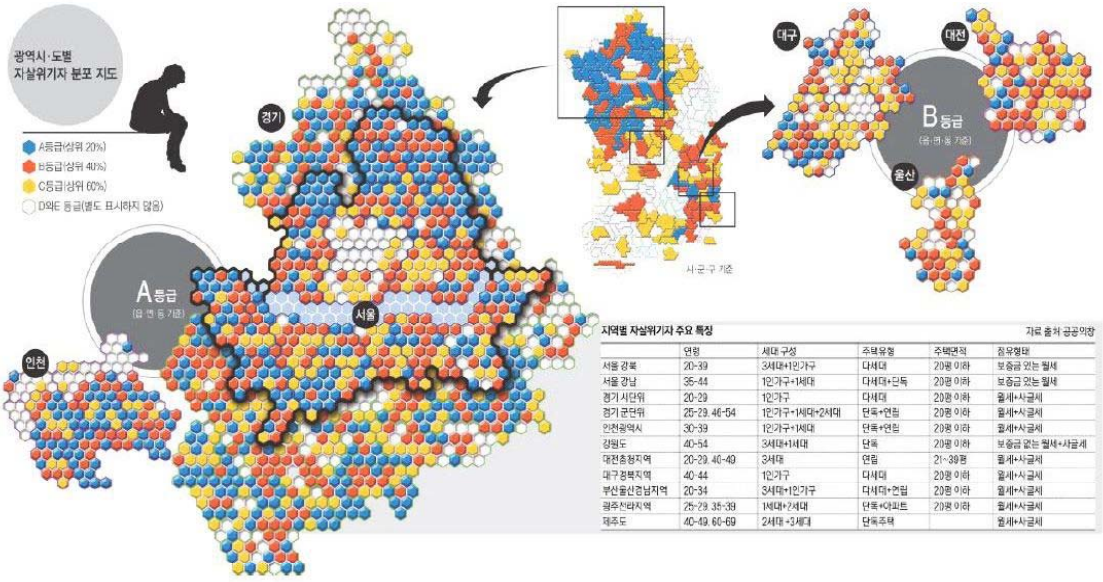


경향신문

f 2,613

[데이터]1인가구·20평 이하·월세…자살 위험군에 드러난 '계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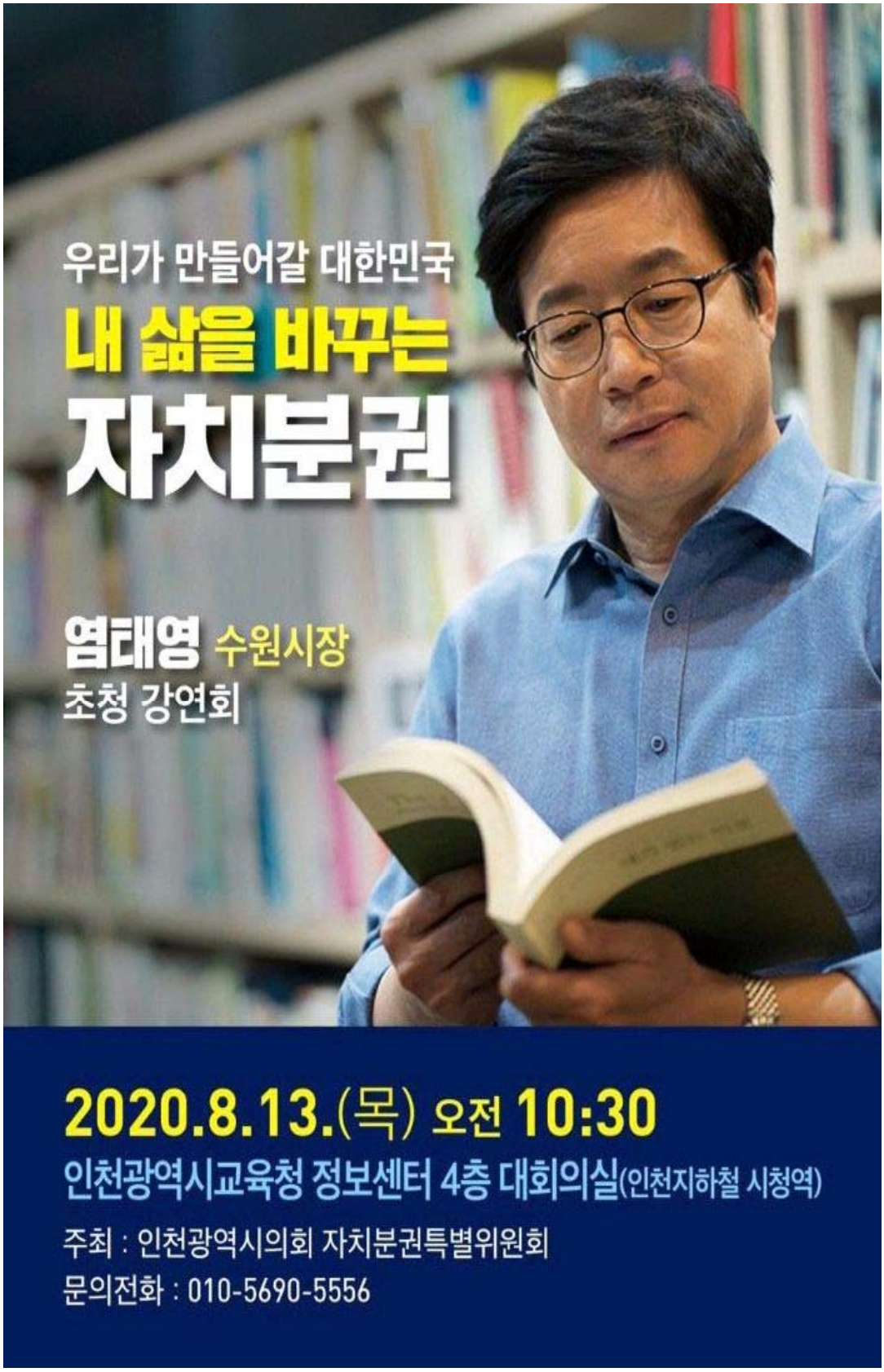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지역별 자살위기자 주요 특징 자료 출처 공공의장

	연령	세대 구성	주택유형	주택면적	점유형태
서울 강북	20-39	3세대+1인가구	다세대	20평 이하	보증금 없는 월세
서울 강남	35-44	1인가구+1세대	다세대+단독	20평 이하	보증금 있는 월세
경기 시단위	20-29	1인가구	다세대	20평 이하	월세+사글세
경기 군단위	25-29, 46-54	1인가구+1세대+2세대	단독+연립	20평 이하	월세+사글세
인천광역시	30-39	1인가구+1세대	단독+연립	20평 이하	월세+사글세
강원도	40-54	3세대+1세대	단독	20평 이하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대전충청지역	20-29, 40-49	3세대	연립	21~39평	월세+사글세
대구경북지역	40-44	1인가구	다세대	20평 이하	월세+사글세
부산울산경남지역	20-34	3세대+1인가구	다세대+연립	20평 이하	월세+사글세
광주전라지역	25-29, 35-39	1세대+2세대	단독+아파트	20평 이하	월세+사글세
제주도	40-49, 60-69	2세대 +3세대	단독주택		월세+사글세

3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염태영 수원시장
초청 강연회
2020.8.13.(목) 오전 10:30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센터 4층 대회의실(인천지하철 시청역)
주최 :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문의전화 : 010-5690-5556

2020 정책연구

인천형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김정욱·이형준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정책연구 2020-24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광역시-군구 사무 이양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